

현장 통제 강화, 2단계 '정상화' 추진의 발판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 중단하라

철도공사는 3월 말까지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실패하자 교섭 중단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현장을 들쭉시키고 있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되, 장기근속자를 일정 비율로 우대하고 승진T/O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만약 이 안을 받지 않고 근속승진제 사수를 고집하면,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단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면 기재부로부터 삭감된 인건비를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지만, 이 약속은 부도 수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근속승진제 폐지와 함께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자구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거짓 약속은 이미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최연혜는 복지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축소하면서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전은커녕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과 성과급의 140퍼센트 환수였다.

철도공사는 3월 초 노조와 합의를 깨고 전격적으로 남원·점촌 시설사업소를 외주화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철도공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근속승진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3월 26일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근속승진제 폐지안을 받아들일길 원치 않는다.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바로 개인별 성과 평가를 부활시켜 현장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근속승진제는 관리자들과의 눈치 보며 살지 않으려고 철도 노동자들이

노조를 민주화하면서 쟁취한 소중한 성과였다.

또, 근속승진제 폐지는 2단계 '정상화', 즉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퇴출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현장조합원 정서

그래서 현장조합원들은 근속승진제를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3월 26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전국의 지부장들이 김영훈 집행부가 내놓은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강하게 반대한 것은 현장조합원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이었다. 결국 이 안은 노조의 교섭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3월 30일 사측과의 교섭이 중단된 이후, 근속승진제 사수를 결의하는 지부 성명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사측의 현장 흔들기에 대응하고자 현장 순회도 시작됐다.

단협이 중단되고 철도공사의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지는 지금, 이런 흐름을 근속승진제 사수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 기층의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이와 같은 투쟁을 조직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또 철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동참해 함께 싸운다면, 투쟁의 효과도 크고 자신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하고 정부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마저 침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려는 시행령(안)은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관제 허수아비 기구이자 진실 은폐를 위한

틀러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쟁은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를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으로 돌려려는 투쟁의 일부다. 이것은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싸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싸움에 함께 나서자.



함께 참가합시다!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잇기

4월 18일(토) 오후 3시 서울광장
오후 2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 (예정)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제'
4월 16일(목) 오후 7시 서울광장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행동'
4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야금야금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을 공격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격은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추진으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매각, 공기업의 '기능 조정', '유사·중복 업무 통합' 따위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철도의 경우,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공항철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난 1월 성남-여주, 부전-일광 2개 노선 운영을 경쟁 입찰로 정하겠다고 사업 설명회까지 열었고 상반기 중에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에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수서KTX에 이어 철도 운영권을 쪼개 팔아 철도에 '경쟁 체제'를 굳히겠다는 것이다.

여객과 화물 운송 분리를 시작으로 철도공사 본체를 분할하는 민영화도 계속 추진 중이다. 예컨대, 화물 분리의 전 단계로 시행하는 화물 사업부제가 4월 1일 기습적으로 시행됐다. 물류본부장을 공모로 채용해 사업관리, 예산,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화물열차 1인 승무와 탄력적 근무형태 도입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시설·유지보수 부문의 외주화 확대를 통한 인력과 업무 축소 역시 당장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분할을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도 있다.



외주화에 맞서 싸우는 시설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지난 3월 9일 철도공사는 남원, 점촌 시설사업소와 서울건축사업소 56명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강행했다. 또 내년까지 총 2백45명의 시설 업무를 외주화하려 한다. 이미 2013년 현재 철도 시설 노동자의 21퍼센트가 외주업체 소속인데도 말이다.

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를 하는데,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외주화가 열차 탈선 등 끔찍한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또 부족한 인력 때문에 기존 노동자와 외주 노동자 모두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받으며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안전 위협

이에 맞선 시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3월 31일 결의대회에 시설 노동자 4백여 명이 참가했다. 곧 더 큰 규모의 2차 집회도 열 예정이다.

철도의 운전, 차량, 열차승무 등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도 이 투쟁에 연대해 함께 외주화 확대를 막아야 한다.

최근 철도공사가 호남선KTX 개통에 따른 인력을 전혀 충원하지 않고 전환배치와 외주화로 메운 것에서 보듯,

외주화는 철도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시설, 전기, 차량, 운수 등의 직종 교섭에서 외주화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다.

지금 투쟁에 나선 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확대해 외주화 공격을 일부라도 저지한다면, 앞으로 외주화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는 철도 외주화 반대 서명운동 등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제천에서는 제천 시설지부와 철도민영화저지제천대책위가 출근길 홍보전을 함께하고 있다. 서울 동부대책위도 철도역에 외주화 반대 현수막을 걸고 연대에 나섰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 확대로 철도 안전을 해치고 민영화로 가는 길을 닦는 외주화를 막아 내자.

가뭇에 단비처럼 반가운 지부들의 현장 투쟁 소식 사측의 공격에 단호하게 저항해 제동을 걸다

올해 들어 몇몇 지부의 조합원들은 사측의 공격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며 사기를 회복하고 있다.

오봉역 수송 조합원들은 인건비 부족을 핑계로 사측이 시행한 대체근무 제한에 맞서 '규정 지키기'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지원 인력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부곡기관차지부와 부곡차량지부 노동자들의 연대도 큰 도움이 됐다.

서울기관차승무지부는 근속승진제 폐지의 명분을 쟁취하려고 사측이 시도한 설문 조사 조작 사실을 폭로했다. 결국 사측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얻어냈고, 통과하게도

전체 설문조사를 폐기시켰다.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은 열차 승무 근무표를 개악해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던 사측의 계획을 막아 냈다. 이 투쟁은 다른 전동차 기관사들의 승무율을 높이려던 시도도 잠시 늦추는 효과를 냈다.

이 사례들은 어떻게 하면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사측의 노동조건 공격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현장조합원들은 작지만 소중한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확산하면서 더 큰 투쟁을 건설하는 자양분으로 삼자.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문의 : 010-7750-1876(이정원)